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3월 19일(목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과장 신동학(044-203-4240), 정민규 사무관(4248)

'안전사회 확보와 안전산업 성장' , 두마리 토끼 잡는다

- 제7차 무역회의에서 「안전산업 활성화 방안」 발표 -

- **안전투자 확대… 15년 정부·공공 12.4조원 투자를 산업성장의 마중물로**
- **민간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… 안전기준 선진화, 재난보험 활성화, 안전 핵심기술 조기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**

□ 지난해 **8월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**에서 **"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,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,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."**(대통령 모두말씀).라는 지적에 따라,

○ **국가 안전대진단을 산업으로 연결**하고, 첨단센서 등 **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안전산업을 새로운 창조산업의 영역**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**'안전산업 활성화' 실행대책을 마련, 본격 추진**하게 된다

○ 동 대책은 지난해 **국민경제자문회의**에서 제안된 '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성장'의 **후속조치**로, 2015.3.19일 **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**되었다

□ 이번 대책은 ① **안전대진단을 안전산업 도약의 계기**로 적극 활용하고, ② **민간 중심의 자생적 안전산업 성장여건을 마련**하는데 중점을 두었다.

① 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

○ **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서 12조 4천억원의 안전투자**를 통해 **안전산업 성장을 견인**

* 정부(3.1조원, 전년대비 17%↑), 공공기관(9.3조원, 전년대비 16%↑)

** 수요창출산업(예시) : 건설 및 설계·감리, 센서 활용 계측업,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, SW 유지관리 서비스 등

○ **'안전설비 투자펀드**(5조원, '14.9월 신설)**' 활용을 촉진**하기 위해 **지원한도를 확대**하고, **대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지원대상도 확대***

* (지원한도) 건별 150억원→300억원, (지원대상) 대진단 연계사업 수주기업 등 포함

② 규제 선진화를 통해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

○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하여 기준간 불일치 또는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하므로 **'국가 안전기준'의 일원화된 관리체계*를 마련**하여 이를 해소

* 「안전기준 심의회(안전처)」를 통한 '국가 안전기준' 통합·관리

○ **안전제품 기술기준도 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상향**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, **표준산업분류에 안전산업 특수분류를 신설**하여 **산업의 정책적 육성기반** 마련

○ **재난의무보험 확대***, **위험관리 컨설팅을 보험사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등** 보험 기능을 강화하여 **민간의 자발적 안전조치를 강화**하고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유도

* 재난취약시설 보험 의무가입 근거 마련, 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 대상 확대

③ 안전 新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 추진

○ '소방 웨어러블 기기' 등 **"안전분야 5대 핵심기술 개발"**을 통해 **지능형·사전예방형 안전기술을 조기 상용화**

○ 지역별 하천범람 정보 등 **재난안전분야 공공데이터**(117종) 및 **시설·교통안전 분야 정보공개***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 마련

* (시설) 38천개 주요시설 안전등급, (교통) 총 6종(10만건) 교통사고, 도로상황 정보 등

○ 아울러, **중동**(사이버 보안, 지능형 CCTV), **동남아**(ICT 활용 자연재해 경보시스템) 등 **신흥시장의 안전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** 지원

* G2G 마케팅, ODA 연계, 해외 안전규제 정보 제공 및 인증 취득 지원 등

[별첨1] **「안전산업 활성화 방안」 요약자료**
[별첨2] **「안전산업 활성화 방안」 보고서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신동학 과장(☎ 044-203-4240), 정민규 사무관(☎ 044-203-424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세부 문의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※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**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**이 있는 경우, 아래 **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 당 부 서	담 당 과 장	담 당 자
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	신동학(044-203-4240)	정민규사무관(044-203-4248)
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	-	권영걸사무관(02-2100-0461) 최영수사무관(02-2100-0462)
기재부 산업경제과	강종석(044-215-4530)	최원석사무관(044-215-4532)
금융위 보험과	김종훈(02-2156-9836)	김동현사무관(02-2156-9841)
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	백현식(044-201-3921)	양화승사무관(044-201-3922)
미래부 정보보호기획과	홍진배(02-2110-2920)	이강용사무관(02-2110-2921)

별첨1

안전산업 활성화 방안

[요약자료]

Ⅰ. 안전산업 현황 및 문제점

1. 세계 안전산업 동향

□ **안전 수요 증가로 급성장*** 중이며, **중동 등 해외진출도 유망****

* 전 세계 안전시장은 2,530억불 규모('11)로, '21년까지 연평균 7% 성장 전망(Freedonia)

** 안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중동의 안전 시장은 연 10% 이상 성장

○ **첨단 기술*과 금융 서비스****에 기반한 **대표적 융·복합 산업**

* ICT 등 첨단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목되어 다양한 제품·서비스 창출 가능

** 글로벌 안전전문기업들은 융·복합, 사업 확장을 통해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변모

□ 미국, 독일 등 **선진국은 안전산업 육성을 국가 주요과제로 추진 중***

* (美)「재해 경감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 기본체계」 마련, R&D 및 상용화에 주력
(獨)「첨단기술전략 2020」의 '10대 미래 프로젝트'에 보안 분야 포함

2. 국내 안전산업 문제점

1 안전 관련 규제에 의해 시장 규모가 좌우

○ 주요 **선진국은 민간의 자율 규제가 중심**이 되나, **국내의 경우** 재난·안전을 공공의 역할로 인식, **정부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높음***

* '14년 국내 주요 안전투자(12.9조원)의 82%(10.6조원)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

○ **현실화되지 못한 안전규제***와 불합리하고 중복된 **안전기준 난립**

* 안전진단·점검 기능을 공공부문이 상당수 독점

2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이며, 기업 발전 인프라 취약

○ **규모가 영세***하고 **시장선도형·기술혁신형 기업이 부족**

* 영세기업 중심(제조업 기업 평균 매출, 51억) : 소방산업 15억, 보호구산업 10억

* 소방산업은 상장기업이 1%,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4%에 불과

○ **안전산업 별도 분류체계가 부재**하여 통계 등 **기초자료가 미흡**하며, 관련 분야 **전문인력도 부족**

Ⅱ. 세부추진과제

과제 Ⅰ '안전대진단' 연계 안전투자 확대

1. 안전투자 확대

공공부문

◈ **SOC 및 건물, 시설물 보수·보강** 등에 **총 12.4조원 투자**(전년比 17% 증가)

○ 정　　부 : 교통, 항만, 학교 등 3.1조원 (전년대비 0.5조 (19% 증가))

○ 공공기관 : 에너지·교통·항만 등 9.3조원 (전년대비 1.3조 (16% 증가))

* 상기 투자금액은 '안전대진단 5대 분야' 안전투자 기준
(정부 전체 안전예산 : '14년 12.4조원, '15년 14.7조원)

민간 투자(30대 기업)

□ '15년 **주요 대기업**(26개 그룹)**은** 전년대비 약 7천억원 증가(29%)한 **3조원을 안전 부문에 투자 계획**

2. 민자 활용 안전시설 개·보수

□ **(노후 SOC 개·보수) 안전대진단 결과,** 보수·보강 대상 시설에 대해 **분야별 수익모델을 마련**하여 **"민자 활용 시범사업"** 추진('15.12월)

* 우선 학교, 도로·철도 등 '5대 분야' 대진단 결과 중심으로 추진

□ **안전투자 기업 인센티브**

○ **(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확대) 공제율 인상, 공제대상 확대***

* (공제율) 3% → 최대 7%, (공제대상)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등 추가

○ **(안전설비 투자펀드)** 중소·중견기업의 안전 관련 노후시설 교체, **신규 안전설비 투자시 「안전설비 투자펀드**('14.9월 신설)**」 지원**

⇒ **지원한도 확대**(건별 150억원·업체별 200억원 → 300억원) 및 **안전대진단 결과와 연계**하여 **지원대상 확대**

* 대진단 연계사업의 수주 기업, 시설 개선 대상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

과제 2 안전규제 선진화

1. 안전기준 정비 및 진단·점검 기능 전문화

□ **(안전기준 정비) 각종 안전기준 난립**(22개 부처, 116개 법령, 약 2만개)에 따른 **기준간 불일치 및 중복규제** 해소

○ **「안전기준 심의회」**를 통해 **'국가 안전기준' 통합·관리**

□ **(안전제품 기술기준 선진화)** 안전제품 기술기준을 ISO 등 국제규격 승인가능 수준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수준의 제품 개발 유도

○ 우선 **'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**(임의 인증)'을 **국제규격까지 충족하도록** 별도 기준 제정 ⇒ 안전 관련 **신기술 투자, 신제품 생산 유인 제공**

□ **(진단·점검 기능 전문화)** 공공기관이 전담 수행 중인 안전진단·점검 분야에 민간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 → 공공기관은 감시·감독에 집중

* 독일,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, 공공기관은 감시·감독에 집중하고,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업(독일 TUV 등)이 전기·가스, SW 컨설팅, 시험·인증 등 안전진단을 수행

2. 안전산업 분류체계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

□ **안전산업 분류체계 신설**

○ 표준산업분류에 **안전산업 특수분류 신설**, 과학기술표준분류에도 **안전기술 별도 코드화하여 관리**

⇒ 안전산업 정책 지원 기반 마련

□ **안전산업 특화 인력 양성**

○ (현장인력) 유망 안전산업 분야 **마이스터고 지정**('15년 1개)

○ (전문인력) **안전분야 전문대학** 및 **특성화 대학원 육성**

- 소방·응급분야 중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(25개교, 28개 학과), '기업 재난관리 특성화 대학원' 지정, SW 안전분야 대학연구센터 지정·확대

⇒ **기업 맞춤형 인재 배출, 양질의 일자리 제공**

3. 재난보험 제도 개선으로 민간 중심 안전관리 체계 확보

□ **재난보험 사각지대 보완 및 미비점 개선**

○ **(의무보험 보완)** **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**상 관람전시시설, 공사장 등 **민간 재난취약시설***에 대한 **의무보험**(제3자 인명 및 재산피해 보장) **도입**('15.12월) 및 환경책임보험 도입(16.7월)

*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근거 마련, 개별법에 의무보험 관련 조문 신설 검토 → 재난취약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보험 도입

○ **(의무보험 확대)** **「다중이용업소법*」** 및 **「화재보험법**」** **개정**을 통해 **재난 사각지대 보완**

* 22개 대상 업종 중 1층에 위치한 6개 업종(제과점, 일반음식점, PC방 등)도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

** 보장 범위에 '화재' 외에 '폭발', '붕괴'까지 포함

□ **보험회사를 통한 위험관리 컨설팅 등 체계적 위험관리 서비스 확대**

○ **위험관리 컨설팅**을 **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**(금감원 신고 수리)하여 안전관리를 통한 **재난 취약점 개선 유도**

○ **'화재보험협회'**의 **안전점검을 화재 외에 폭발·붕괴까지 확대**

과제 3 안전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

1. 안전 분야 5대 핵심기술 개발

우선 추진과제	개발내용	적용분야(예시)
① **소방 웨어러블 기기** (~'17)	• 소방복 등에 센서 부착 → 재난상황 송수신, 생체정보 전송	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
② **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** (~'18)	• 차간거리 제어, 긴급자동 제동시스템 등	대규모 연쇄추돌 사고 예방
③ **개인위치 인식 시스템** (~'17)	• 비콘 기술을 통한 재난발생시 맞춤형 대비·탈출 유도	재난사고시 인명피해 최소화
④ **스마트 빅보드**(~'18)	• SNS 등 모든 재난정보 빅데이터화 → 전조 감지, 예측모델 개발	재난사고 실시간 지휘 통제
⑤ **국민안전 로봇**(~'18)	• 건물 붕괴, 가스 누출 등 극한 재난환경 구조용 로봇	위험시설 원격 점검

2. 공공 안전정보 개방을 통한 새 비즈니스 창출

□ 공공정보 전면 개방

○ **(재난안전 분야) 대진단 결과를 포함**한 정부기관 보유 **재난안전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**(재난안전분야 공공정보 154종 中 '17년까지 117종 공개*)

* 위험물탱크 정보, 무더위쉼터 정보, 급경사지 DB, 재해위험지구 DB, 지역별 하천범람 정보 등

○ **(시설 및 교통안전 분야)** 주요 시설물(공공, 민간) **안전등급 정보 공개***, **교통안전 분야**(사고, 공사, 도로상황 정보 등) **총 6종**(10만건) **공개**('11년~)

* 현행 공공시설물 외 안전 취약 민간시설(D,E 등급)까지 안전등급 공개('15.12월)

* 「재난관리법(안전처)」상 '특정관리대상시설' 중 공유시설(23천개) 안전등급 우선 공개('15.4월)

□ 공공 안전정보 활용 사업화 지원

○ 유망기업에 대한 **'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센터'**의 **컨설팅, 홍보, 비즈니스 공모전 개최** 및 **수상작 창업·기술 지원**(중기청, 행자부 등)

* (사업화 사례) 도로 사고 즉시 알림 서비스(아이나비, '15.3월말~)

3. 첨단 안전산업 해외진출 지원

□ 중동, 동남아 등 신흥시장 중심 진출 추진

○ 대상 권역(국가)의 **재난·재해 유형에 부합되는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***

* (중동) 국가 기간시설 사이버 보안, 지능형 CCTV, 사설 경호서비스
(중국) 산업현장 안전 IT 시스템, (동남아) ICT 활용 자연재해(쓰나미, 태풍 등) 경보시스템

○ **해외 안전 규제정보 제공**(국표원) 및 **해외인증 획득 지원**(중기청, 안전처)

* 국표원 '해외인증정보시스템' 활용

** 중기청 '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', 안전처 '소방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' 등

□ 기술집약형 중소 · 중견 안전기업의 해외진출 채널 다양화

○ **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과 연계, G2G 마케팅, 대·중소 동반진출** 등 효과적 추진전략 수립